

식민지 기억을 재구성하기: 국가간 연대를 위한 제언*

이 충 훈**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일본의 식민주의와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은 전후의 양국의 지배세력과 그것이 형성한 국가간 지배연합에 의하여 망각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신우익의 성장과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기존의 기억에 대한 국가간 지배연합의 변화를 야기하면서 식민 지배와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새로운 연대와 사회운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식민주의와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당했던 양국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공통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희생자들간의 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사회운동적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원폭 피해자들간의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사례를 통하여 식민지배와 전쟁의 희생자들이 가진 공통의 경험과 기억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국가간 사회운동의 틀을 세우고, 향후 식민지 및 전쟁에 대한 기억의 인정과 보상을 위한 연대를 마련하는데 핵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주제어: 국가간 사회운동, 국가간 연대, 기억, 식민주의, 일본, 전쟁, 한국, 희생자

* 글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로스 풀(Ross Poole)과 이 글의 초고에 대하여 유용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 뉴스쿨 정치학 전공, 박사 과정

1. 서론

냉전의 해체, 전세계적인 민주화, 한 세기의 마감 및 또 다른 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기억¹⁾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증대해왔다. 과거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유적 및 제도들의 출현, 다문화주의 및 다원주의의 확산에 따른 문화혈통 집단의 기억의 재현, 매스 미디어의 기술적 진화와 그 역할의 확대, 경제적 지구화에 따른 기억의 문화산업화, 자서전이라는 장르의 유행 등은 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억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일단을 보여준다.

정치적인 영역 역시 이러한 기억의 재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주의 및 권위주의 정권들의 붕괴와 더불어, 그 정권들의 형성 및 지배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정권들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소외되었거나 억압되었던 기억들이 인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부정을 청산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

1) 이 글에서 사용되는 ‘기억’이라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전제한다. 첫째로, 이 글에서 기억은 집합적 기억을 의미한다(Halbwachs 1992). 그러나 집합적 기억의 형성을 사회적 틀(frame)과 맥락(context)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학적 관점과는 달리 이 글은 집합적 기억이 정치적 권력관계에 의해서 주조되거나 억압받는 정치적 조건들과 세력들의 관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사용되는 기억이라는 개념은 개인사와 구별되며, 특정한 집단이 경험한 역사적 이벤트에 근거한다. 즉, “경험과 기억의 항상 매개되고, 이러한 매개는 항상 권력 관계에 의해 주조된다”(Fujitani, et al. 2001: 1). 둘째로, 이 글에서의 기억이라는 개념은 역사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주로 근대 국가에 의해 매개되는 소위 공식적 역사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사용될 것이다(Nora 1989). 이러한 방식의 개념화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해왔는지를 권력관계의 차원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역사가 제거하려고 했거나, 잊으려고 했던 것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권력의 정치적 정통성이 어떠한 기억의 역사화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기억은 집합적 차이의 수호자로서 기능하며 이런 의미에서 기억을 공유한 집단의 독자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축적된다(Wolin 1989: 40). 따라서 집합적 구성원으로부터 그 집단이 공유한 기억을 분리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을 수행하고 있다. 동유럽,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구현 과정은 실패와 성공 여부를 떠나서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냉전의 전승국들에서도 냉전에 의해 억압되어왔던 과거의 기억에 대한 재평가의 요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국가나 민족 혹은 인종의 정체성을 넘어서 유럽 전체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공통된 경험에 근거한 기억은 중요한 논쟁적 위치를 차지하곤 한다.

이러한 기억에 대한 인정 투쟁²⁾에서 한국과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미국의 정치적 헤게모니의 약화,³⁾ 일본에서의 새로운 우파 민족주의의 출현, 한국의 민주화 등은 냉전과 권위주의 하에서 식민지 및 태평양 전쟁에 대한 기억의 해석을 독점하고, 그것을 반공주의 및 민족주의라는 이념과 국가간의 협정, 그리고 다양한 제도 및 필요하다면 강권을 동원하여 뒷받침해왔던 식민지 및 전쟁에 대한 기억의 지배 연합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

2) 최근의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발전과 더불어, 인정 투쟁이라는 용어는 집단이나 개인의 정치적, 문화사회적 요구를 설명하는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개념에 대한 최근의 논쟁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투쟁을 인정투쟁이라는 단일 범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재분배를 위한 투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투쟁으로서 그것과 병렬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Fraser and Honneth(2003)를 참조. 호네프(Axel Honneth)의 경우 규범적 일원론(normative monism)으로 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반면, 프레이저(Nancy Fraser)는 후자의 입장에서 균형적 이원론(perspectival dualism)을 유지한다.

3) 필자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타자를 자신의 의도대로 행위할 수 있게 하는 지적, 도덕적 능력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정치적 헤게모니란 타자를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행위하도록 만드는 지적, 도덕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타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정치적 의도의 관철은 수행적 행위를 동반한 동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헤게모니의 약화는 기존에 유지되었던 지적, 도덕적 능력이 약화되거나(예를들면, 냉전의 종식에 따른 반공주의의 약화), 혹은 헤게모니의 주체가 의도한 대로와 다른 결과와 다른 결과가 출현할 때 나타난다.

한 균열의 가속화는 좀더 다양하고, 주변화 되어 왔던, 갈등적인 담론들과 기억들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즉, 지배 연합의 변화는 그동안 법적,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쟁의 한국인 희생자들에게 그들의 일본 식민주의 및 전쟁에 대한 기억의 인정을 위한 정치적 기회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억의 인정을 위한 투쟁의 규범적 정당성은 새로운 사회 운동을 위한 정치적 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인정투쟁은 그 운동의 적절한 틀(frame)을 세우는데 실패한다면 새로운 국가주의나 우파 민족주의 세력에게 더욱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기억의 인정 투쟁이 한국과 일본간의 연대적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 역시 국가주의나 우파 민족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기억이 사회운동을 위한 기회와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배타적인 전유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의 근대 국가의 형성과정속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억은 지배세력이 피지배세력을 민족 국가라는 영토적경계 내에서 다양한 국가, 사회적 제도들과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의 도움을 통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동원하기 위하여 발명되거나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위한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Hobsbawm and Ranger 1983; Anderson 1983). 또한 집합적 기억은 탈공산주의 사회(post-Communist societies)나 탈식

4) 사회 운동론(social movement)적 관점에서 특정한 운동의 등장과 성장, 혹은 쇠퇴는 크게 정치적 기회, 운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동원 및 그 과정과 구조, 그리고 운동의 틀(frame)에 의존한다.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McAdam(1996)을 참조. 정치적 기회가 사회운동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원의 동원 및 구조와, 운동의 틀이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Tarrow(1998)를 참조.

민주의 사회(post-Colonial societies)에서 정치적 갈등이나 심지어는 시민 전쟁(civil war) 및 대량학살(genocide)를 초래하는 문화혈통적 집단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⁵⁾ 이러한 사실은 기억의 재구성 과정은 지배와 저항의 담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단히 논쟁적인,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및 전쟁에 대한 기억의 국가간(transnational)⁶⁾ 지배 연합⁷⁾이

5) 예를 들어, 맘다니(Mahmood Mamdani)는 르완다(Rwanda)에서의 후투(the Hutu)족에 의한 츠치(the Tutsi)족의 대량학살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를 후투족의 식민지 시대의 경험과 기억에서 찾는다. 벨기에의 원할한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성된 다수의 후투족과 벨기에의 식민지배와 통치의 대상인 후투족 사이에서 벨기에의 식민지배를 도왔던 소수의 츠치족과의 대립은 1990년대 우간다에서 츠치족이 권력을 상실하고 시민권이 박탈되어 르완다로 이주할 때, 후투족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포의 기억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면서 후투족에 의한 츠치족의 무차별적인 대량학살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Mamdani 2001).

6) 집합적 기억, 나아가 집합적 정체성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한 영토적 경계 내부에서의 특정한 계급이나 인종 혹은 (문화혈통적) 집단들에 초점을 맞춘다. 반대로 국제적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들의 경우 노동자 국제주의나 인권 혹은 종교나 경제적 지구화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과 영향력들이 어떻게 개별인 영토적 경계 내부의 정치적 관계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필자가 사용하는 국가간(transnational)이라는 개념은 우선 전자의 특수성을 보지하고 후자의 보편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일종의 중범위 수준에서의 개념화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로, 필자가 사용하는 국가간이라는 개념은 국제정치에서 정의되는 국제적 공간 속에서 행위하는 단일한 총체로서의 국가와 국가들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이 개념은 한 국가내부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세력들이 그것들이 속한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 다른 국가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7) 이 지배연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식민지 시대의 지배연합이 식민지시대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인적으로 청산되지 못한 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동일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이 지배연합의 중요성은 상대방에 대한 제한적 비판이 상대방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역설적 효과에 있다. 즉, 상호간의 제한된 비판적 담론의 질서가 식민지 시대 이후에 살아남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주의 및 우파 민족주의의 국내적인 정치적 지배의 입지를 상호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비판을 국내용이라고 일축한데서 은연중에 폭로되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간과한 점은 중국, 한국 및 북한에서의 일본에 대한 비판을 가장 잘 성공적이고 정력적으로 국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간 지배 연합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틀(frame)을 국가간 희생자 연대라는 틀로 재구성하고, 90년대를 거쳐 변화해온 지배 연합의 성격과 그것에 대응하는 국가간 연대의 가능성을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2. 망각의 지배 연합

내가 전쟁 후에 받은 교육은 나에게 일본 군대 시스템의 조직이나, 군가, 군대의 계급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 군국화된 충성심을 배우지 않는 대가로, 나는 또한 일본의 침략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도 결코 배우지 못했다. 따라서, 비록 전쟁이 나의 일상의 삶의 배경에 남아있었지만, 나는 일본 군대가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식민지로부터 군대를 모집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북한이나 남한인들이 전쟁 후에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국적을 박탈당했다는 점과 길거리에 방황하는 부상당한 군인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Aiko 2001: 200).

반대로, 일본의 제국군대에 징용된 한국인 병사들은 아이코가 교육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길거리에서 방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을 공유한 동료 일본 병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전후 형성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을 터이고, 아이코가 교육받은 그 어떤 공식적인 역사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아이코의 고백이 일본의 제국군대에 징용된 한국인 병사들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의 식민주의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총체

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라는 점이다.

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일본의 공식적인 역사로부터 배제된 셀 수 없는 한국인이 존재하였다. 식민시대의 초창기부터 급격하게 확대되어, 이후 재일교포의 초석이 된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자로부터(Weiner 1989; 1994),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한인 원폭 피해자들(Keishburo 2001), 그리고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동원된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 희생자들(Yoshiaki 2000; Tanaka 2002)⁸⁾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전쟁의 수탈과 억압을 광범위하게 경험했던 한국인 희생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국인 희생자들은 아이코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일본의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는 망각의 대상이다. 일본이 교과서를 개정할 때마다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제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반증한다. 아이코 자신은 일본의 한 학자로서 식민주의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식적인 역사에서 소외된 기억들을 발견하지만, 아이코와 동일한 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이러한 기억의 재발견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자신의 식민주의 및 전쟁의 기억을 망각해야만 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식민지 및 전쟁의 기억에 대한 망각화는

8) 그러나 최근에 출간된 이 두 저작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위안부로 활동했던 일본 여성들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연구의 부재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선 위안부 문제가 일본 내에 만연했던 여성에 대한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일본이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속한 여성을 대하는 인종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둘째로, 그러한 연구의 부재는 일본내에서의 여성의 억압에 대한 역사를 숨기면서 일본의 성적 노예화가 오직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와 전쟁에만 국한된 비정상적인 시대의 이례적 사례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가간 연대의 틀을 세우는데 있어서 위안부로서의 동일한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 연대보다는 일본의 계몽된(?) 여성주의자들과 각국에 산개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간의 비대칭적 연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마지막 문제는 1995년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위하여 설립된 아시아 여성 기금(Asian Women's Fund)이 실패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정한 정치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비스(Herbert P. Bix)가 지적하듯이, 1945년 8월부터 1946년 4월에 걸쳐 일본에서는 전쟁 책임의 문제와 관련된 3가지 ‘중요한 전략적 틀(strategic framing)’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우선 첫째는 히로히토 천황이 모든 전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무장해제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그의 이미지를 재건하려는 일련의 캠페인이고, 둘째는 전쟁과 식민주의 책임을 일본의 극소수의 전범들에게 전임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범 재판이며,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천황체제의 설립에 기반한 새로운 평화 헌법의 제정이다(Bix 1992: 300).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그들의 리더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의 책임을 극소수의 군부세력에게 전가함으로써, 그리고 식민주의에 행해졌던 오명을 평화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기억을 망각해야만 했다.

천황제의 유지와 평화로운 일본이라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전범재판의 과정은 동시에 식민주의 및 전쟁의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책임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이 과정은 전후 일본 문제를 총괄했던 미군정의 이해관계와도 상치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독일과는 달리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적인 점령의 방식을 택했던 미군정은 효율적이고 용이한 통치를 위하여 이미 종전 이전부터 천황제를 유지,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미일 관계를 구상하고 있었고, 이러한 구상은 전후 냉전 질서의 도래와 더불어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는 바로 1945년 가을에 대동아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맥아더의 칙령이었다. 이러한 용어의 대체는 일본에 의해 행해졌던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 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만주,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식민주의를 은폐하고, 일본 ‘제국의 기억 상실’을 가져왔다. 이러한 ‘기억 상실’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침략 역사

에 대한 기억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고, 나아가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과의 일본 식민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기억 상실’은 미국이라는 제국에 대한 일본의 종속적인 지위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일본의 진보세력들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간의 종속적인 지위에 관하여 계속해서 비판해왔지만, 일본이 식민주의와 전쟁의 가해자였다는 점을 종종 망각함으로써, 일본내에서의 가해자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실패하였다(Gluck 2005: 201-5).

결국 미국과 일본의 전후 국가간 지배 동맹은 일본의 식민주의와 전쟁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전범 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구분된 극소수의 군부세력에게 전가하고, 천황제와 헌법의 평화주의적 운석을 통해, 식민주의와 전쟁의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삭제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희생자신화(victimology)의 기원이 되었다.

이와는 달리,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잔혹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의 불굴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 식민주의가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과 심지어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형태로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경험은 민족 역사의 한 부분으로 깊게 각인되어 있고, 삼일절과 광복절, 그리고 독립 기념관 같은 상징 및 기억의 제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깊게 삼투되어 있다.

일견 이러한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기억은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던 대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할만 한 것이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은 그 스스로를 식민주의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잔재들을 청산하려고 노력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내에서 흔히 민족해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투쟁의

과정은 과거의 식민주의에 대한 총체적 기억을 전제로 그것을 청산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식민주의를 경험했던 민족이나 문화혈통적 집단은 피해자로, 그리고 식민주의를 행사했던 국가나 민족은 가해자로 재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이나 문화혈통적 집단(ethnic group)간의 총체적인 대립으로 이해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변증법은 가해자 내부의 피해자와 피해자 내부의 가해자의 경계를 흐리면서 일방의 총체화로 귀결될 위험을 끊임없이 내포한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을 보고하면서 나찌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보내는데 일조하였던 유대인 리더들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Arendt 1994: 117)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남한의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아렌트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을 나찌 수용소로 보내는데 일조하였던 많은 유대인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남한의 리더들 역시 일본의 식민주의와 전쟁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해방이후에 어떠한 책임에서도 방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군정의 지배와 협조하에 그들이 식민지 지배하에 누렸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고스란히 유지, 확장하였다.

일본에서의 미군정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의 미군정 역시 냉전의 형성과정에서 그들의 지배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본의 식민주의와 전쟁 수행의 동조자란 의미에서 식민주의 및 전쟁의 가해자들과 동맹을 구축하였다. 베닝고프(H. Merrell Benninghoff)가 1945년 9월 15일자로 미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고무적인 요소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잘 교육받은 수백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서울에 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 봉사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오명은 사라져야

만 한다... 비록 그들이 다수는 아닐지라도, 그들은 아마도 가장 큰 단일 그룹일 것이다”(Cummings 2004: 14-5에서 재인용).

일본의 식민주의와 전쟁 수행에 봉사했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미군정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자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미국의 인식하에 미국이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었다. 따라서 하지(John Reed Hodge)가 정확하게 인식했던 것처럼 해방 정국 하에서 친미파는 친일파 및 민족 배신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수동적인 저항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는 모든 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증대하고 있다. 친미파라는 단어는 친일파, 민족 배신자, 협력자 등에 추가되고 있다”(Cummings 2004: 20에서 재인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된 이러한 종류의 한미간의 동맹은 친일, 친미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지속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유지하고 영속화하는데 핵심적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해방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식민지 시대의 기억은 식민지 이후의 권력 구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치적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친일파의 친미파로의 변신을 통한 한미 동맹은 지극히 취약한 토대를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에 대한 기억은 그 자체가 정치적 정통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배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것이었다.

식민지 시대의 기억과 관련된 이러한 모순, 즉, 식민지 시대의 부정의한 기억에 대한 청산의 요구와 그러한 기억 자체의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위험성은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한 지배세력으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지배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친일이라는 가해의 기억을 역사로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가해의 기억을 극소수의 전범에 대한 처벌을 통해 주도면

밀하게 벗어나려고 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친일의 기억은 국가의 강권에 의해 뒷받침된 다양한 기억의 제도들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언론, 학계, 종교, 문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원천 봉쇄되었다. 아이코가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에 대하여 교육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 친일파의 궤적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기억의 원천봉쇄가 수동적 전략이라면, 좀더 능동적인 전략은 반공주의에 기반하여 전개되었다. 우선, 반공주의는 반공을 축으로 슈미트(Carl Schmitt)식의 정치화적과 아의 뚜렷한 구분을 통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억의 편린들을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 정의와 부정의의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이분적 구도로 재편한다. 한국전쟁과 냉전이라는 역사적 시간을 통하여 발전된 이러한 반공주의는 가해자로서의 친일파에게 해방 이후 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구도의 긍정적인 면들을 마치 자연적인 과정의 일환으로서 재점유함으로써 가해자들이 선, 도덕, 정의의 구성적 계기에 도덕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즉, 반공이라는 것을 국기로, 그리고 마치 선형적인 선, 도덕, 정의로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에 공헌했던 기억에 압도적인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억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반공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물리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식민지 기억의 관점에서 일종의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 수준에서의 기억의 지배 연합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일본의 경우 전후의 식민주의 및 전쟁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소수의 전범에게 전가되고, 식민주의 및 전쟁에 대한 정체성은 일본을 일종의 피해자로서 재구성되었다. 이

러한 가해자 의식의 제거와 새로운 피해자 의식으로의 정체성의 재구성은 일본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의 요구를 낳았지만, 동시에, 가해자들의 피해자 의식으로의 도덕적 무임승차도 용이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원폭 피해자뿐 만 아니라, 전후 미군정에 의한 토지개혁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 나아가 전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일본으로 되돌아온 식민지 운영자들에 이르기까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피해자 의식에 동참하였다(Orr 2001).

그러나 한국인 피해자들의 존재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항상 위협적이었다. 즉, 식민주의와 전쟁의 한국인 피해자의 존재 그 자체는 일본이 피해자가 아니라 식민주의와 전쟁의 가해자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의 새로운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 위협적이었다. 물론, 일본은 전후 한국인의 법적 지위(시민권)를 박탈함으로써 식민주의 및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을 원천봉쇄하면서 그들의 기억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정을 철저하게 외면해왔지만, 이전의 식민지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대신에 새로운 외교관계의 수립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이라는 주권 국가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표한다는 국가와의 비밀협상을 통해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했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를 기억하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항상 위협적인 것이었다. 친일파라는 식민지 시대의 가해자들이 어떠한 책임이나 처벌 없이 식민지 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유지해왔던 사회에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친일파의 현존을 상기시키고 지배 세력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협정은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에 의

해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지배세력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최근에 부분적으로 공개된 한일협정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희생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포항제철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국가의 기간 산업에 투자되었거나, 심지어 지배세력의 정치 자금으로까지 사용되었다. 소위 근대화의 경제적 업적들은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에서 한국인 희생자들이 흘린 땀과 피의 대가로 그 근간을 마련하였던 것이다.⁹⁾

3. 기억의 국가간 연대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이라는 과거에 대한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악순환을 낳았다. 일본은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인 희생자들에게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에¹⁰⁾,

9) 식민지 이주(colonial migration)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국제적인 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은 근대적인 주체의 형성(예를 들면, 노동자 계급의 형성)이나 국가에 의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 경제 성장이나 실업, 그리고 문화 교류 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통적인 이주 국가(emigration country) 중의 하나로서 한국은 아랍 지역으로의 건설 노동자의 파견이나, 독일로의 광부 및 간호사의 파견, 심지어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군대의 파견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해 주도된 다양한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에 연구는 국제적인 인구이동에 한국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고, 그 영향과 효과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근대화 과정을 국가간 수준에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0)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특한 입장 중의 하나는 새로운 기억이나 사실의 발견과는 상관없이 과거에 성립된 국가 사이의 조약을 통하여 과거사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들 조약 중 일본 정부에 의해서 자주 인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조약은 종전 이후에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이다.

한국의 경우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인정과 요구는 종종 무시되거나 국가주의적 동원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적절한 수준의 반 일이나 우파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일은 그것이 지배 세력의 식민지 기억을 드러내지 않는 한, 오히려 지배세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일본에 대한 국가의 비판은 일본 식민주의 및 전쟁의 한국인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에 입각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주의적 동원을 통해 지배 권력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교과서 개정이나 영토 문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역설적으로 일본의 우익 세력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익세력의 확대는 다시 교과서 개정이나 영토 문제, 그리고 식민지 기억에 대한 새로운 우익 역사해석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악순환의 문제는 그것이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그것을 양국의 우파 세력들이 서로를 비판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 희생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식민주의 및 전쟁에 의해 야기된 개별적인 고통들,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의 50년에 걸친 유기라는 3중고를 겪어왔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서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일본의 식민지배의 결과로 야기된 이주노동자였으며, 원폭의 피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이러한 육체에 각인된 기억에 대한 요구들이 한국 및 일본의 지배세력 모두로부터 거부되었다는 점에서 3중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 희생자들은 항상 법적, 제도적으로 배제된 일종의 ‘예외 상태 (the state of exception)’에 처해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모든 관계가 양국의 우파 지배세력을 강

화하는 악순환적 고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으로부터 야기된 한국인 희생자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연대는 기억의 지배 연합에 대항한 국가간 희생자 연대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 일본의 반핵 평화 운동간의 연대는 국가간 기억의 지배 연합에 대항한 국가간 희생자 연대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초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공히 원폭에 의해 야기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원폭에 대한 기억은 홀바흐(Maurice Halbwachs)가 집합적 기억의 구성 성분으로 강조한 동일한 구조, 지속성, 규칙적인 진보, 그리고 정규성의 요소들을 공유한다(Coser 1992: 22-3). 구성 성분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집합적 기억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구성원들간의 공통된 경험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 기억을 재구성하고 비판적으로 전유하기 위한 기회라는 관점에서 한국인 희생자들과 일본인 희생자들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 일본인 희생자들과는 달리 한국인 희생자들은 일본 정부의 보상으로부터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도 배제되었다.

일본에서의 동일한 경험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은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후 일본의 시민권 규정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이코의 고백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동원을 위해 부여되었던 한국인들의 황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는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박탈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일본 시민권자에게 한정되어 부여되었던 전후 일본 식민주의 및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법적,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일협정은 이들의 기억에 대한 요구를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용했을 뿐,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인정도 용인하지 않았다.¹¹⁾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경험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은 일본의 반핵 평화운동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간의 국적을 넘어서는 연대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운동가들은 한국인 희생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완전한 보상, 한국인 희생자들과의 연대 및 지원, 일제 시대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일본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 등을 요구했다(Keisaburo 2001: 38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본의 반핵 평화운동이 단지 원폭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나아가 식민주의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즉, 원폭에 대한 동일한 경험은 단지 그것의 차별적인 취급에 대한 동일한 인정을 넘어서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식민주의에 접근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이런 의미에서 피폭이라는 동질적인 역사적 경험과 기억은 일본과 한국간의 국가간 연대 운동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주의 및 전쟁의 부정의 및 모순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창으로

11) 그러나 서유럽에서의 아랍계 이주자들이 전개해왔던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집합적 투쟁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의해서는 전개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과 민족을 동일시하는 독일식의 시민권 개념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해왔던 한국인이(그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남한에서 찾던 북한에서 찾던 간에) 일본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종종 민족에 대한 배신이나 일본에서의 성공을 위한 사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종류의 공적 문제의 사사화는 시민권의 문제를 공적으로 쟁취해야 할 투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개인의 부담스런 선택으로 남겨놓는다. 이러한 일본의 시민권 제도와 그것에 대한 관념의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나 그들 후손들의 공적 참여나 공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거주하는 공간속에서 공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시민권이라는 개념에 통합된 민족과 시민이라는 개념을 해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한해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정책 등이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서 기능한다.

일본의 사회운동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간의 이러한 연대와 요구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국가가 강제 징용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었다 할 지라도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강제 징용은 전전의 헌법, 즉 현재와는 다른 정치체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후의 정부 보상법은 그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까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회피하였다. 반면에 미쓰비시와 같은 대기업들은 핵폭탄이 투하될 당시에 그 회사에 있었던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 역시 현재의 회사는 당시의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Keisaburo 2001: 3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간 희생자 연대는 일본의 법무성으로 하여금 한국인이 원폭의 희생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및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법무성의 요구는 이 운동의 전략에 두 가지 옵션을 제공했다. 하나는 이러한 법무성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대항하여 법무성이 요구하는 자료들의 억압적인 측면들을 폭로하고 그 요구 자체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성의 요구에 응하여 법무성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원폭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및 증거에 계속해서 접근해가는 방법이었다(Keisaburo 2001: 391).

이러한 옵션에 직면하여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위한 국가간 연대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비록 후자의 방식이 한국인 희생자들에게는 증명 부담을 안겨주고, 재판의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지만(Keisaburo 2001: 391),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법적

투쟁은 일본이 식민주의 및 전쟁을 통하여 자행한 폭력을 일본의 정당성의 상징인 법적 체제의 내부에서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즉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기만을 가장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법적 체제의 틀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국가간 연대를 통하여, 일본의 반핵 평화운동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결국 2002년 12월 20일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인 원폭 피해자와 동일한 정도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끌어내었다.

4. 지배연합의 변화와 연대의 새로운 기회 : 결론을 대신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론이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전쟁론이라는 만화, 그리고 교과서 개정 문제에 개입하면서 일본의 공적 영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 세력은 앞서 살펴본 망각의 지배 연합 속에서의 변화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까지 식민 지배와 전쟁의 기억을 망각하려했던 기존의 지배세력과는 달리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와 동일한 언어로 식민 지배와 전쟁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려했다는 대동아 전쟁으로 다시금 재구성되었고, 따라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은 침략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따라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성공에 걸맞는 일본 민족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론과 맞물리면서, 이들은 전후에 형성된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신우익의 주장의 출발점은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일본의 관

계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인식에 기초했다. 즉, 전후의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미국에 의한 일본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종속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종속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해석은 일본 민족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일본 민족으로부터 자긍심을 빼앗으며, 나아가 새로운 지구화의 시대에 부합하여 일본 민족이 나아가갈 정치, 군사적 과제를 수립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역설적인 점은 이러한 신우익의 미국에 대한 비판을 통한 일본 민족주의의 호명, 우파적 기억의 역사화, 그리고 정치적 성장이 미국의 이해관계, 특히 네오콘의 국제 전략과 상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대한 테러 이후에 수립된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의 수정은 한편으로는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군사, 안보상의 비용과 역할을 전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전략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있어서 일본의 존재를 필수불가결하게 만들었고, 일본의 신우익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적과의 동침’이 바로 일본의 새로운 우파 민족주의 세력으로 하여금 식민지배와 전쟁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최근에 심해지고 있는 교과서나 영토 문제, 그리고 신사참배 등을 강력하게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배경인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198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과정은 권위주의 정권의 강권에 의해 형성된 폭력적 억압의 기억에 대한 인정과 보상의 요구를 수반했다. 민주화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재평가나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한 기억들이 재평가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가해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망각의 지배를 폭력적으로 유지했던 권위주의 정권과는 달리, 민주화의 진행은 집합적 기억의 다원화를 공적으로 용인하고 그것의 정당성이 공적인 장에서 논쟁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주의와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해서는 여전히 망각의 지배연합이 구축했던 악순환의 고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동일한 경험에 기반한 희생자들의 연대는 충격적인 기억(traumatic memory)을 재현하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요구함으로써 양국의 국가나 지배세력에 의해 주조된 공식적 역사와 망각에 대항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주의 및 전쟁의 희생자들에 의한 이러한 국가간 운동은 일본 및 한국의 지배세력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형태의 국가간 운동은 원폭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및 전쟁을 통하여 다른 종류의 충격(trauma)을 경험했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한일간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주의와 전쟁을 경험했던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간의 사회 운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희생자들의 공동된 경험에 기초한 기억은 중요한 연대의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신우익의 강력한 등장 속에서 이러한 국가간 사회운동적 대응은 그것에 대항하여 국가간 시민 사회의 연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파적 민족주의의 상호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간 연대가 공동된 경험과 기억을 통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대의 형성은 법적, 정치적 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기억의 재현과 그것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기억들은 편재하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기억의 주제들이 국가간 형태의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공통의 기억을 매개로 한 희생자들간의 연대라는 틀(frame)로 다양한 사회적 운동들을 재구성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 희생자 연대라는 틀이 오직 희생자들만이 모여서 구성되는 배타적 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동시에 희생자들을 산출하는 구조와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연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하나의 예로 제시된 원폭 피해자들의 연대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환경운동에서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핵무기를 없애려는 평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잠재적인 연대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연대는 식민주의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타자들에게 그것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창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망각의 지배 연합이 창문을 아예 없애거나, 창문의 밖을 어둠속에 남겨 놓았다면, 기억의 저항 연대는 창문 밖에 존재하는 희생자들의 기억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식민지 및 전쟁의 기억을 매개로 한 연대의 틀은 특히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극복을 요구한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한 국가나 민족에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강조하는 동질성에 대한 주장은 동일한 영토에 거주하거나 동일한 민족 정체성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식민지 기억과 관련하여 이는 가해자와 희생자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일본의 식민주의 세력의 탈가해자화,

최근의 일본 신우익의 식민주의와 전쟁의 기억에 대한 새로운 전유나 반공주의를 통한 변신에 성공한 한국의 친일파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해자의 기억을 정당화하거나 가해자의 희생자로의 도덕적 무임승차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희생자들의 요구에 의존적인 것처럼 보이는 국가는 한일협정이나 이후의 서로에 대한 악순환적인 제한적 비판에서 살피볼 수 있듯이, 희생자의 요구를 가해자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해왔다. 국가간의 사회적 연대가 공고하지 않다면 ‘외교적 총력전’이라는 수사의 끝에서 ‘외교적 한계’나 희생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는 추상적인 ‘동북아 화해 및 협력’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¹²⁾ 그러한 결말 속에서, 전자는 항상 민족의 한계로 왜곡되어 새로운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토대가 되고, 후자는 과거사에 대한 개인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인 용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에 대한 기억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했던 기억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 민족 모두에서 가해자와 희생자가 존재하는 기억이다. 양국의 역사가 가해자들을 위한 역사였다면 식민주의와 전쟁의 억압의 기억은 이중적 비판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와 민족 내부에서의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의 가해자들에 의해 구성된 지배관계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비판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마법에서 벗어나 일본의 식민주의 및 전쟁의 억압적 기억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국가간 희생자 연대의 틀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것이며, 과거 식

12) 이러한 주장이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의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해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교적 레토릭에 주력하기 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의 피해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증언과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끊임없이 조사, 기록, 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지 시대의 부정의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의 기억을 정당화하는 모든 시도에 일종의 보수적 균형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iko, Utsumi.. 2001. "Korean 'Imperial Soldiers': Remembering Colonialism and Crimes against Allied POWs" in T. Fujitani, Geoffrey M. White, and Lisa Yoneyama, eds., *Perilous Memories: The Asia-Pacific Wa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 Arendt, Hannah.. 1994. *Eichma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Bix, Herbert P. 1992. "The Showa Emperor's 'Monologue' and the Problem of War Responsibility",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8:2.
- Coser, Lewis A. 1992 "Introduction: Maurice Halbwachs 1877-1945", in Maurice Halbwachs ed. and tr. by Lewis A. Coser,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mmings, Bruce. 2004 "Decoupled from History: North Korea in the 'Axis of Evil'" In Bruce Cummings, Ervand Abrahamian, and Moshe Ma'Oz, *Inventing the Axis of Evil: the Truth about North Korea, Iran, and Syria*, New York: The New Press.
- Fraser, Nancy and Axel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London: Verso.
- Fujitani, T., Geoffrey, M, White and Lisa Yoneyama. 2001. "Introduction," In T. Fujitani, Geoffrey M. White, and Lisa Yoneyama, eds., *Perilous Memories: The Asia-Pacific Wa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Gluck, Carol. 2005.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Re-Imperial Times," In Lloyd C. Gardner and Marilyn B. Young, eds., *The New American Empire: A 21st Century Teach-In on U.S. Foreign Policy*, New York: The New Press.
-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trans.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ishburo, Toyonage. 2001. "Colonialism and Atom Bombs: About Survivors of Hiroshima Living in Korea," in T. Fujitani, Geoffrey M. White, and Lisa Yoneyama eds., *Perilous Memories: The Asia-Pacific Wa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Mamdani, Mahmood. 2001. *When Victims Become Killers: Colonialism, Nativism, and the Genocide in Rwand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1996. "Introduction: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 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 on social movem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a, Pierre.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emoire," *Representation* No. 26.
- Orr, James J. 2001. *The Victim as Hero: Ideologies of Peace and National Identity in Postwar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anaka, Yuki. 2002. *Japan's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New York: Routledge.
- Tarrow, Sidney. 1998.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er, Michael. 1989. *The Origins of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Press.
- Weiner, Michael. 1994. *Race and Migration in Imperial Japan*, New York: Routledge.
- Wolin, Sheldon S. 1989. *The Presence of the Past: Essays on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Yoshiaki, Yoshimi. 2000.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